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지난 5월 전주교 안동교구가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내건 사목 구호는 '기쁘고 멋있게'였다. 이를 나는 뒤늦게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그 표어는 50년 전, 안동교구의 첫 교구장으로 부임한 두봉 주교가 취임사에서 "주님 말씀대로 기쁘고 고맙게 그리고 멋있게 살아가자"고 한 말에서 따왔다고 한다.

두봉 주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25세의 나이에 파리외방전교회의 신부로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국에 왔다. 유교 전통이 깊은 안동의 교구장으로 부임하면서 그가 벌인 첫 사업은 교회 따로 사회 따로가 아닌 안동문화회관의 건립이었다.

1979년 불량 씨감자 피해 보상 운동을 벌이던 가톨릭 농민회원이 납치·고문당한 이른바 '오원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온 교구가 떨쳐 일어나 유신정권에 과감히 맞섰다. 두봉 주교는 이 일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멋멋하고 당당하게

결코 불의에는 굴복할 수 없다고 끝까지 당당하게 버텼다. 결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두봉 주교를 추방한다면 후임 안동교구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겠다"는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때 안동교구는 교구장 두봉 주교뿐만 아니라 류강하·정호경 신부도 당당하고 멋졌었다. 오원춘 사건 때 나는 안동교구가 보여 준 그 당당하고 멋 멋진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면서 문화도덕국가가 당선이 원하는 나라라고 하였다. 나는 문화도덕 국가라는 이상에 앞서, 우선 우리 대한민국이 안으로 하늘을 우러라 부끄럽지 않을 만큼 멋멋하고, 밖으로 양심과 정의의 기초해 할 말은 하는 당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무엇보다 공권력의 행사가 정당당당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경찰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숨어서 교통 위반을 단속했다. 행정수사 등 이러한 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나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지금 검찰 개혁이 세간의 화두로 되어 있지만, 검찰 공권력의 행사 역시 정당당당해야 하는 것이 첫째다. 별건 수사, 공작 수사와 같은 구차하고 비열한 공권력의 행사가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 30여

년에 걸친 정보정치 아래서,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으로 용공 좌경으로 몰리고, 죄 없는 동료의 이름을 붙여야 하는 양심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나는 유신 시절 민주회복국민회의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양심선언 운동을 제창한 바 있다.

정의를 말하는 자, 다른 사람의 눈에 그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비쳐야 한다. 개혁은 무엇으로 하는가. 그것은 개혁하는 사람들의 높은 도덕성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개혁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혁은 우선 나 하나 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스스로 업신여긴 연후에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그렇게 2년 반을 달려 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성장과 반성 새로운 출발에의 의지조차 없는 것이 더 안타깝지만, 유감스럽게도 나는 안으로 무능하고 밖으로 참 못한 정부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무능과 위선의 '내로남불' 인사,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참사, 그 엄청난 재정의 투입에도 약화되고 있는 경제 불평등과 이어지는 일가족 자살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무능은 끝 간 데가 없다.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는 포용국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 안으로 공정하고 밖으로 당당한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밖으로 사드 문제에서 보듯이 중국에 치이고, 홍콩 사태에도 눈치 보느라 말 한마디 못하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트럼프의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을 받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는 말과 달리 대일 관계는 아베로부터 불신과 무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갑먹은 개' '살은 소대기리' 같은 조롱을 당하면서 서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앙합동조사본부에서 귀순의향서까지 썼는데도 포박된 채 안대가가 씌워져 판문점으로 이송된 탈북 여인 두 명이 복송 직전에 안대를 벗고 소스라치게 놀라 탈색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고 하고 있다. 개인이건 나라건 모를지거 멋멋하고 당당할 일이다.

청춘 특·특



김진아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1년

해양 쓰레기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두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고체 형태의 폐기물만을 의미한다.

해양 쓰레기는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 해변·해안 쓰레기, 부유 쓰레기, 해저·침적 쓰레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양 쓰레기는 육지 쓰레기가 하천과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면서 발생한다.

특히 장마철 폭우 또는 태풍이 발생할 경우,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증가한다.

또한 피서객이 해수욕장에 버린 쓰레기가 파도 또는 바람에 휩쓸려 바다에 들어가는데, 이 외 배에서 버린 쓰레기도 해양 쓰레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바다의 죽음,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해양 쓰레기가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진 어망이나 통발에 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 어업(Ghost fishing) 문제가 심각하다. 매년 바다새 100만 마리, 고래나 바다표범 등 보호해야 할 해양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해양 쓰레기에 걸려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닐봉지, 플라스틱 조각, 스티로폼 등은 바다 생물의 위장에 쌓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생물이 먹은 것을 먹지 않아 서서히 죽게 만들기도 한다.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다 생태계 문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기술적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해야 한다. 2018년 10월 기준, 해양 쓰레기는 담배꽂이가 241만 2151개로 1위를 차지했고, 음식 포장지(173만 9743개)와 플라스틱 병(156만 9135개)이 뒤를 이었다. 재활용법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사업자에게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산의 빔틀을 방지하기 위해 썼던 비닐 역시 이제는 대부분 제공하지 않으며, 편의점과 마트에서 무

상 제공했던 봉투도 이제는 유상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국가는 소비자들이 옥수수과 사탕수수, 미역과 같은 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지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1위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대책 없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다. 과거엔 중국에 다량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출했으나 2018년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면서 쓰레기들이 동남아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제품 소비를 줄임으로써 기업의 대체 원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말은 모순이다. 해양 쓰레기 1·2·3위는 담배꽂조, 음식 포장지, 플라스틱 병이다. 이들은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없다. 기업에 대한 국가적 개입

이 절실한 이유다. 국가는 기업에게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셋째, 기존의 플라스틱을 분해하도록 만드는 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알벌부채형 나랑' 이 장내에서 플라스틱을 소화시켜 분해한다는 사실을 발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연구진들을 향한 국가의 폭 넓은 지원이 절실하다. 연구진들도 또 다른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술과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이 대중화될 경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매년 8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진 지금, 걱정만 하기보다는 현재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여기에 기업과 국민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느리지만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社說

지방 자치·분권 강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모두 일곱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핵심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31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변화한 지역 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논의도 없이 사실상 방기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발의 이후 8개월간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심사 법안으로 올렸다. 하지만 전문위원의 보고

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571개 국가 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 이행하는 내용의 '지방 이양 일괄법' 역시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겨졌으나 통과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분권 관련 법안,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주민 참여 3법 등도 1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 임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방자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자치 관련 단체들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여전히 '2할 자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정치권은 이번에도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문화전당 4주년 관람객 천만 시대 맞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제부로 개관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간 관람객은 연간 250만 명 등 총 971만 명(10월 말 현재)에 이르렀으며 올 연말까지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문화전당은 애초 희망했던 대로 세계적인 문화기관으로 우뚝 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우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문화전당 운영효과 분석은 긍정적이다. 문화전당 개관과 운영(2016-2018년)으로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생산 유발 효과 843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157억 원, 취업 유발 효과 1만629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컸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발전소 발돋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전당 활성화로 '문화가 밥이 되는 시대'를 꿈꿨던

지역민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통합을 비롯해 문화전당의 전당장 공백 장기화, 길러 콘텐츠 부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국가기관인 문화전당의 운영 기간이 내년 4월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인 국비 투입과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최경환 의원은 지난 8월 운영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화전당은 개관 4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전당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이 국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전당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도 서둘러야겠다.

無等鼓

국회에 전문(戰雲)이 다시 감돌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 시점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안 등 검찰 개혁 법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여야 4당+1'(민

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 안에서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황교안 대표가 단

유종의 미

구들은 너무 뾰족하고 단단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교실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다칠 만한 물건을 치우고, 청소를 하며 아이들 스스로 눈높이에 맞는 규칙을 만들다 보니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도 줄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니 교실이 행복해졌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충분히 놀 수 있다고 느끼니 스스로 놀이 도구와 교실 공간을 아끼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핸드폰 사용량이 줄어든고 놀이 공간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하며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워 나간다.

다당제로 시작된 20대 국회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낙제점'이다. 촛불 혁명과 대통령 탄핵 등 여사의 현장을 관통했던 20대 국회는 정쟁을 거듭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지 못했다

는 평가다. 단식·사발에 장의 집회는 물론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까지, '동물 국회'의 구태를 재연하기도 했다. 여기에 법안 처리율은 3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무기력한 '식물 국회'의 모습도 보여 왔다.

경제·안보·외교 등 모든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민생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서라도 20대 국회 막판에 여야가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는 지혜를 발휘,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었으면 한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기고

아이들은 '잘' 놀아야 해요

진다. 교실이 행복하게 변화한다. '잘' 노는 것은 어떻게 노는 것일까? 재미있을 법한 놀이를 알려 주어야 할까? 노는 법을 몰랐던 내가 놀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된 것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 아동옹호센터에서 실시한 '어디든 놀이터·놀이 키트'를 활용한 연수를 받은 후였다. 교육 과정 속에서 정답이 없이 자유롭게 떠돌고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직접 해보며 자유와 즐거움을 느꼈고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학교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주로 무엇을 하고 노느냐고 물었더니 "핸드폰이요" "게임은 해요. 유튜브 보고"라고 입을 모았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 때문에 야외 놀이도 못하고, 학원으로 인해 운동장에서 뛰어놀 시간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핸드폰만이 즐거움을 주고 있었다.

이에 핸드폰이 아닌 다른 놀이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교육받은 대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디든 놀이터·놀이 키

트'를 열고 놀이 도구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아이들이 조금씩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뭐 하고 놀 거예요? 규칙 빨리 설명해주세요." "나는 공기 잘 해! 공기놀이해야지!" 아이들 입에서 여러 말이 흘러나왔다.

처음 실내 놀이를 진행해보니 시끄럽고 번잡스러워 내가 괜히 시작한 것일까? 하는 고민도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이 놀이에 익숙해지자 놀랍고 감사한 변화가 보였다.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니 소외와 비난이 사라졌다. 아이들은 놀이 만들기예 집중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갔다. 이런 놀이를 통해 평상시에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곪들던 아이들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을 보며 놀이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아이들이 직접 놀이를 만들다 보니 안전했다. 교실 놀이를 계획하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였다. 사실 교실 공간은 아이들이 놀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다. 책상과 의자, 각종 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국록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